

KT 노동조합

KT TRADE UNION
발행일: 2008년 7월 30일(수)

31th

■ 발행인: 지재식 ■ 편집인: 김민수 ■ 주소: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031-727-4815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디자인 여백(02-2279-9631)

장마 끝, 휴가 시작!... KT하계휴양소를 가다

경치, 시설 좋고 경제적 부담 없어 '만족'

우리 KT조합원들도 고된 일상을 잠시 접고 달콤한 여름휴가에 빠져들고 있다. 사실 휴가는 받았지만 막상 경치 좋고 편안하면서도 저렴한 휴가지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KT노동조합과 회사는 조합원들의 편안한 여름휴가를 위해 7월 18일에서 8월 말까지 전국 곳곳에 하계휴양소와 수련관, 콘도미니엄 등의 하계휴양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7월말 평창과 용평, 속초 등을 다녀며 휴가를 즐기고 있는 조합원들을 만나보았다.



평창 니코미코펜션

강원도 평창에 있는 니코미코펜션은 맑은 공기와 수려한 경치, 깔끔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 휴가지로는 제격이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 나올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휴가를 맞아 우리 식구와 처제 식구들이 함께 왔다. 경치도 멋지고 시설도 깔끔해 만족스럽다." 니

코미코펜션을 찾은 한 조합원의 말이다.

그는 휴가가 좀 빠르지 않냐는 질문에 "학교 다니는 애들을 둔 조합원들은 어쩔 수 없이 애들 방학이 시작돼야 휴가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아직 어린 우리가 먼저 오게 됐다"며 "근처에 좋은 허브농장이 있는데 내일은 식구들과 같이 거기로 갈 계획이다. 경기도 좋고 자연의 향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수련관도 여름휴가를 보내기는 더 없이 좋은 곳이다. 저렴한 가격에 매끼 식사가 제공되고 운동시설, 게임방 등 각종 시설도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회망 1순위다.

대관령수련관(구 용평)에 집을 둔 한 조합원은 "오대산 등산코스도 좋고 용평리조트 뒤쪽으로 가면 겨울엔가 활영지도 있는데 내일은 거기로 가서 아내랑 분위기를 잡아볼 생각"이라며 떠들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사실 밖으로 나오면 식사문제가 걸린다. 매끼 사먹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 먹자니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수련관에서 나오는 식사가 괜찮은 편이라 맘이 놓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비가 오면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방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련관은 내부에도 여러 시설들이 있으니 까 걱정이 덜하다"고 덧붙였다.

'휴양소 늘려주길', '놀이방 운영' 등 건의
마지막으로 속초에 있는 동해콘도를 찾았다. 바닷가

바로 앞에 자리 잡은 콘도에서는 시원한 동해바다가 한 눈에 들어온다. 근처에는 여름 기분을 한껏 낼 수 있는 경포대와 속초해수욕장이 있고 대포항과 낙산사, 설악산도 가까이 다양한 경치와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동해콘도를 찾은 한 조합원은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하룻밤 숙박비가 25만원이더라. 사실 휴가철 2박 3일 숙박비를 싸게 잡아도 30만원은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신경 써줘서 조합원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휴양소를 찾은 조합원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더 많은 조합원들이 이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계휴양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계휴가기간에 수련관과 콘도, 펜션 등 하계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30% 정도이다. KT노동조합은 더 많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휴양시설 확대 및 시설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조합원이 물리는 휴가철에는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한 조합원은 "펜션은 수련관과 달리 내부 시설이 없어서 비가 올 때면 아이들이 놀 장소가 마땅치 않다"며 "휴가기간이라도 어린이놀이방을 운영하면 편리할 것 같다"고 건의했다.

TM 가이드라인 강화
거부시 계속 전화걸면 징역 5년

개인정보 유출 과문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통신업계 텔레마케팅(이하 'TM')이 8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0일 신규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하나로텔레콤도 8월 10일 영업 재개와 동시에 TM을 시작한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고객정보유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사 및 제재가 끝나는 대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엄격한 TM 가이드라인 준비
앞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무작위로 TM을 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적용된다. 방통위는 TM업체 및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텔레마케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알려진 주요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가 엄격해진다. 통신사업자는 금융기관 등 사업제휴를 맺은 제3기관에 정보를 위탁할 때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통신사업자가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위탁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넘겨 TM을 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금융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통신사와 제휴해 통신서비스와 연관된 보험, 카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TM을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다. 아울러 가입자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다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TM 전화를 받고 거부사를 밝혔음에도 계속전화를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을 받게 된다.

해지방어TM도 불법행위로 규제
서비스를 해지했음에도 계속해서 TM을 하거나 이용자가 거부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체에서 TM을 계속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대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다더라도 부가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에게 영업전화를 거는 것도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신고하면 사업자는 곧바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KT에 미칠 가능성 대비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KT는 유통채널과 영업직원을 통한 대면 영업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은 향후 조합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IPTV 이제 상용화만 남았다

방통위, 7월 23일 고시안 확정... 8월 11일부터 신청접수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23일(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관련 고시안을 최종 확정. 수년간 벌여 왔던 IPTV법제화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규제개혁위원회가 수정 제시한 IPTV법 시행령 제정안을 최종안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상용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다.

당초 시행령 제정안은 6월 27일 확정되었으며, 방통위는 이를 연내 추진할 목표로 8월 11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시안은 시행령 중 최초 사업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안대로 확정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IPTV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5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KT,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대기업은 다른 방송채널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격을 얻게 되었다. 콘텐츠동등접근의 대상을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채널 단위로 명시한 것이다

IPTV 종합편성, 보도전문 콘텐츠사업자 등의 경우 사업자를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3조원 이상보다 크게 완화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밖에 설비고시는 인터넷망이 없는 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대해 이용할 수 있는 IPTV필수설비에 대해 규정했다. 인터넷포털업체는 일단, 망동등접근 대상에 FITH 등 IPTV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망이 포함되며, 망 시설이 없는 IPTV 사업자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설비의 최소 사용기간은 1년이다.

또한 방통위는 IPTV사업자들이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IPTV 관련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IPTV법 시행령 중 지배력 전이방지관련 조항을 '회계분리'로 확장한 것이다. 케이블업체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KT와 같이 망을 보유한 사업자가 IPTV 사업부문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분리만으로는 공정경쟁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내용 2면>**

불벌더위 속 봉사활동 펼쳐

중앙상집,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녹향원 찾아 제조작업



노동조합 중앙본부 상무집행위원들은 7월 28일(월) 오후 의왕시 청계동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녹향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상집 전원은 오후 2시경 녹향원에 도착해 김나현 원장(42)으로부터 시설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듣고, 작업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았다. 이후 두 팀으로 나누어 고추밭 제조작업과, 고구마밭 정리 및 고구마

순 채취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활동은 장마 후 30도가 넘는 불벌더위 속에서 진행돼 비 오듯 땀은 쏟아졌지만, 잡초더미 사이로 길이 뚫리고 원생들 식탁에 올릴 고구마순이 6가마니 이상 모자,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과 땅의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녹향원 김나현 원장은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도와줘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손길이 많이 닿지 않은 곳인데 주변이 깔끔해서 원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류준용 중앙본부 조직처장은 준비해 온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정소, 빨래, 감장 등 뭉دت지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오겠다"고 따뜻하게 화답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등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희망과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무료 생활법률상담 게시판 오픈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법률적인 고충해결을 위해 1:1 무료 생활법률상담 게시판을 8월초 오픈합니다.

생활법률상담 게시판을 조합원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고충에 대해 변호사가 알기 쉽게 법률컨설팅을 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조합원의 신상정보가 보호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재식 위원장 공약이기도 한 생활법률상담 게시판을 임금과 제도개선, 고용확보 투쟁에 집중하던 노동조합이 활동영역을 넓혀 조합원들의 생활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친근한 모습으로 변모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 조합활동관련 법률지원
 - 사건발생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 규약, 규정관련 법률 자문
- 조합원 생활법률 지원
 - 조합원의 법률적인 고충 해결을 위한 1:1 무료 컨설팅
 - 법률지원 사업의 체계적 운영

상담방법

- KT노동조합 홈페이지(www.kttu.or.kr)에 로그인 하신 후, 생활법률상담 게시판을 글을 올리시면 전문 변호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디지털 변호사 이명우



KT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키워드, IPTV

7월 23일 IPTV관련 고시안 확정... 8월 11일부터 사업신청 접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이하 'IPTV법')은 시행령 제정안이 6월 27일 확정되고, 7월 23일 고시안이 의결되면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법제화 논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8월 11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IPTV법이 통과된 이후 5월 9일 입법예고 되었으나 통신사업자, 케이블방송사업자, 인터넷포털사업자 등 각계 입장에 부딪혀 지체되어 왔다. 특히 지상파방송사, 케이블사업자 등은 망동등접근권, 콘텐츠동등접근권, 사업자 지배력 전이 등이 KT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매출 목표를 12조5,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평소 성장동력으로 IPTV와 와이브로를 꼽은 KT로서는 IPTV법과 업계동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IPTV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조합원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쟁점들을 짚어본다.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맞는 필수설비 임대대 다른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격적 영업보다는 내실기하기 고민을

케이블사업자들은 상품결합판매를 통한 IPTV 마케팅비용의 회계분리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KT 등이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고 결합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IPTV 가입자를 늘리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들은 IPTV에 소요되는 마케팅비용을 분산 처리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매력적인 콘텐츠 제공이 아닌, 공격적인 영업력만을 내세운다면 과열경쟁을 불러와 자칫 실속 없는 허수 늘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T는 과거 비영업부서의 불법적인 상품판매로 과징금을 물었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지난 6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유출로 4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고객 수 늘리기와 함께 고객정보 및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이 통신서비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준다.

방송사로서의 양심 추가... 공익성 필요

외부에서는 IPTV의 사업주체가 KT와 같은 통신기업이기 때문에 방송사로서의 윤리문제를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콘텐츠동등접근권에서 프로그램 선정 기준으로 국민적 관심도를 빼고 공익성을 넣은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KT는 통신서비스뿐 아니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로서의 공익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IPTV사업으로

현재 메가TV, 하나TV, myLGTV 등을 중심으로 저렴한 결합상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IPTV로 투자대비 얼마만큼의 성장세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대세를 뒤로 하고 뒷집만 지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IPTV와 와이브로를 성장동력으로 꼽은 KT로서는 7년간의 매출정체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이자, 통신기업에서 엔터테인먼트기업으로 이미지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일은 FTTH 등 망 보유 능력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콘텐츠 등으로 얼마만큼 차별화를 거둘 수 있는지가 아닐까 싶다. 콘텐츠의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공익성을 갖춘 IPTV,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통하지 않은 IPTV, 조합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KT IPTV사업을 기대해 본다.

고시안 주요 내용

- 허가·신고·등록·승인
 - IPTV제공 사업은 허가, 콘텐츠사업은 신고(기존 사업자)·등록(신규사업자)·승인(보도·홀쇼핑·종합편성)으로 구분하여 심사절차·방법, 심사사항, 배점 등을 규정
 - 심사기준은 IPTV법 제4조 제4항(IPTV제공사업자 허가)과 방송법 제10조 제1항(콘텐츠사업자 승인)이 정한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을 득한 제공사업자를 선정
 - IPTV 제공사업의 최초 허가신청 기간은 '08. 8.11~8.18일로 규정
 - 콘텐츠사업에 대한 신고·등록·승인은 고시 시행후 수시
- 회계
 - 타 사업의 인력투입 시 IPTV 관련 영업비용으로 처리
 - 회계분리 검증을 쉽게 하기 위해 융합가능설비 별도 회계정리
 - '무형자산', '영업비용' 각각의 항목에 콘텐츠의 산업재산권 및 개발비용을 포함시켜 정리
- 설비
 - 필수설비는 선로기반설비(전주, 관로 등)와 가입자선로공용설비(XDSL, FTTH 등)로 구분
 - 필수설비 이용사업자에 망이 없는 사업자도 포함
 - 제공설비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

출처: 방통위

IPTV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해 실시간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다. 실시간 VOD, 문자메세지, 전자상거래, 게임, 노래방 등 다양한 양방향 통신서비스를 TV수상기를 통해 제공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서비스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IPTV법은 방송과 통신의 결합, 이용자편의 증진 및 콘텐츠기반 산업발전 기대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8일 제정되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메가TV, 하나TV 등의 VOD(주문형 비디오)은 프리 IPTV라 할 수 있다.

IPTV법 시행령 주요 내용

사업자는 5년마다 재허가 심사 받아야

IPTV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5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초 시행령에는 최초 사업허가 기간이 3년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5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최초 허가고시는 항목별로 100점 기준에 60, 70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고, 재허가는 이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2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방송의 공정책임, 공정성, 공익성 △콘텐츠 수급계획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재정적 능력 등을 기준으로 허가를 심사하게 된다.

콘텐츠동등접근권은 프로그램 아닌 채널 단위

KT,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대기업은 다른 방송채널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격을 얻게 되었다. 콘텐츠동등접근의 대상을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채널 단위로 명시한 것이다.

콘텐츠 사업을 하려면 납입자본금과 실자본금을 각각 5억원 이상 갖추어야 하며 주조정실, 보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추고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대기업 진입 완화

한편 이번 IPTV법 시행령으로 대기업의 보도채널 소유가 쉬워져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일고 있다. IPTV 종합편성, 보도전문 콘텐츠사업자 등의 경우 사업자를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의 3조원 이상보다 크게 완화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4월 발표한 기준에 따라 자산 10조원 미만에 속하는 에경, 현대백화점, 태광, 동부, 대림, 이랜드 등 36개 기업이 '자격'을 갖춘다면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

망동등접근권으로 포털업계 진입장벽 낮춰

이 밖에 설비고시는 인터넷망이 없는 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임대해 이용할 수 있는 IPTV필수설비에 대해 규정했다. 인터넷포털업계는 일단, 망동등접근 대상에 FTTH 등 IPTV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망이 포함되어, 망 시설이 없는 IPTV 사업자에 대해서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설비의 최소 사용 기간은 1년이다.

사업 투명성 위해 회계분리 기준 제시

방통위는 IPTV사업자들이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IPTV 관련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IPTV법 시행령 중 지배력 전이방지 관련 조항을 '회계분리'로 확장한 것이다. 케이블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KT와 같이 망을 보유한 사업자가 IPTV 사업부문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분리만으로는 공정경쟁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KT를 비롯한 IPTV 제공사업자들이 분리해야 할 회계에는 급여·복리후생비·유형자산감가상각비, 콘텐츠 구입·개발비, 결합판매 수수료 등 거의 모든 업무가 포함된다. 또한 투입되는 개인별 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포함한 세부업무분장표를 만들어야 하고, 업무별 시간투입비중을 100분의 1단위로 표시한 실제업무수행표도 작성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KT와 IPTV법 쟁점 시행령

지상파방송사, 케이블업계 등은 IPTV법 시행령 논의단계부터 논란이 된 망동등접근권, 콘텐츠접근권, 사업자 지배력 전이 등이 KT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뚜껑이 열리면 콘텐츠 경쟁이 될 방송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KT가 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0만 가입자는 겨우 80억?

IPTV가 지상파 TV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입자 규모가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 KT는 최근 유선전화의 매출이 예상보다 급감하고, 하반기 결합상품 출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등으로 마케팅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매출목표를 하향 조정할 상태다. 때문에 가입자 수를 늘릴만한 성장동력으로 IPTV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메가TV는 6월말 기준 누적가입자가 70만명을 돌파, 앞서 시장에 진입한 하나TV 누적 가입자 수 83만명을 바짝 뒤쫓고 있다. KT가 올해까지 FTTH망을 80%정도 구축하여 IPTV 시장의 토대를 마련하면 결합상품 등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결합상품으로 8,000원에 서비스되고 있는 메가TV가 100만 가입자에 도달할 경우 매출액이 80억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한

다. 이 계산대로라면 300만 가입자를 양산해도 240억원에 불과하다. 굵직한 사업들이 조 단위 매출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맥 빠지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IPTV의 점진적 가입자 증진은 KT가 통신기업에서 방송을 겸비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변신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

기존채널+킬러콘텐츠 확보해야 광고수의 기대

IPTV 시장을 선점하려면 근본적으로는 가입자들의 구매력을 자극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의 확보가 시급하다. 지상파 채널과 케이블 채널은 기본으로 확보하고, 메가TV만의 독특한 킬러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한다. 소비자들이 기존 지상파나 케이블 TV, IPTV를 한꺼번에 시청하는 이중지출을 원할 리 없고, 광고주 역시 재방송 프로그램에 광고경쟁을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메가TV가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대상의 방송을 시작하고, 영어콘텐츠 제작에 뛰어든 것은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시행령의 콘텐츠동등접근권에 따르면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채널단위의 계약이 가능해 KT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고 조심스레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케이블 업체들이 CP 등록을 꺼린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KT 계열사인 올리브, 사이더스FnH 등의 콘텐츠와 지상파 방송 재전송만으로는 IPTV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가 벅거울 수 있어, 케이블사업자들과의 관계설정도 매우 중요하다.

망 임대료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난 7월 14일, 방통위는 중재 끝에 KT와 11개 케이블TV 사업자가 설비 임대료 협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케이블TV사업자들이 이용한 KT의 전주와 관로 임대료를 74억6,000만원에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KT는 2004년 케이블업체들에게 전주와 관로 이용에 대한 임대료를 37억원에서 206억원으로 높여 계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IPTV사업 개시를 앞두고 결정된 것이어서 KT의 콘텐츠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짐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 양측은 올해 사용분부터는 방통위가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을 토대로 망 임대료를 산정하기로 했는데, 적용대상이 통신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케이블TV사업자들은 IPTV를 앞두고 KT가 통신과 방송을 분리해 임대료를 산정하지

IPTV 법제화 일지

- 2004. 10 광대역통합망(BcN) IPTV 도입 필요성 제기
- 2005. 10 유승희 의원 정보미디어사업법안 발의
- 2005. 11 김재홍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 2005. 12 KT 여의도 미디어센터 개설 및 시연
- 2006. 01 정통부 및 방송위 개별 법안 준비 착수
- 2006. 01 방송통신심사준비 TF 가동
- 2006. 07 방송통신융합추진위(옹추위) 발족
- 2006. 08 정통부 방송위간 고위정책협의회 개최(IPTV 공동시범사업 합의)
- 2006. 10 IPTV 시범사업자 선정 KT·다음 선정
- 2006. 11 옹추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확정
- 2006. 11 IPTV 공동시범서비스 개시
- 2007. 01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 2007. 02 노동조합, 옹추위의 자회사 분리 논의에 대한 반대입장 천명
- 2007. 03 노동조합, 방송위원회의 IPTV도입방안에 대한 비판
- 2007. 04 옹추위 IPTV 법안 다수안·소수안 확정
- 2007. 07 국회 방통특위 IPTV 법안심사 개시
- 2007. 07 노동조합, 이광철의원의 융합법안 비판
- 2007. 07 노동조합, IPTV법제화 토론회 참가 "자회사 분리 불가·전국연허 허용" 주장
- 2007. 07 노동조합, 국회의원 면담 제안서 제출(IPTV 제안서: 자회사 불가, 전국연허의 필요성 강조)
- 2007. 11. 15 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 소위 IPTV 쟁점 합의
- 2007. 11. 20 국회 방통특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가칭) 의결
- 2007. 11. 23 국회 방통특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수정 의결 (외국인에 대한 내용 수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내용으로)
- 2007. 12. 28 국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통과
- 2008. 05. 09 방통위 IPTV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2008. 06. 27 방통위 IPTV 시행령 제정안 확정
- 2008. 07. 10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2008. 07. 23 방통위 IPTV 관련 고시안 심의·의결

플라자 조합원 ITC분야 재배치 교육현장 탐방 “새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성실이행”



지난 6월 체결된 노사합의에 따라 플라자 조합원들의 ITC 분야 재배치를 위한 교육이 7월 9일(월)부터 시작됐다. 6월 노사합의 이후 현재까지 조합원들 내에서는 이번 교육에 대한 걱정과 우려

가 많아 KT노동조합에서는 1기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대전인재개발원을 찾아 교육중인 조합원들을 만나서 조합원들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또한 교육장 순회 및 강사진들을 직접 만나 이번 교육이

ITC업무 재배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단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한 조합원은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교육을 받고 보니 너무 부담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날 배운걸 그날 평가하는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출제되거나 큰 부담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내용과 강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해 했다. 다른 교육생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롤-플레이(Role Playing)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할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합원들에게 교육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고 교육의 효과는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노사 모두의 공동 목표다. 진단한 결과 당장 큰 걱정거리는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끝난 이후의 진로에 대해 이런저런 소문과 오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교육

이 그러하지만 사실 결혼한 여성조합원들이 많은 플라자 업무특성상 2주간의 교육기간과 생소한 내용, 실습평가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닐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이번 교육이 ‘평가를 통한 슈어내기’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고, 이번 재배치 교육도 평가를 빌미로 ‘구조조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괴소문도 있었다.

재배치 문제는 조합원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로 설명과 설득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관건은 합의이행의 진정성이다. 사측은 조합원들이 부담없이 편안히 교육을 마치고 새 직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교육은 1기수당 260여 명씩 2주 교육을 기본으로 모두 6기수 1,600여 명이 참여하며 오는 10월 2일 마치게 된다. 노동조합은 ITC교육을 마칠 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을 것이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 선출

결선투표끝 68.37% 지지 얻어



민중노동당은 새로운 당대표로 강기갑 의원이 선출되었다고 7월 25일 밝혔다. 민노당은 당초 7월 17일 온라인투표와 직접투표 등의 방식을 통한 5일간의 지도부 경선 1차 투표를 마감하고 9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신임 당 대표를 확정하지 못했다. 당은 1위 강기갑 후보(41.25%), 2위 이수호 후보(20.17%)를 대상으로 20일부터 6일간 새 대표를 뽑는 결선 투

표를 실시해, 68.37%의 지지를 얻은 강기갑 원내대표를 당대표로 확정했다.

강기갑 대표는 “지지해준 당원들과 국민들께 감사 드린다”고 인사하며, “서민 정당으로서 민중의 고통과 함성, 눈물을 닦아주는 민주노동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당을 일궈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 당원 총투표에서 강기갑 대표, 이수호 혁신-재창당위원장, 박승환 전광주시당 위원장, 박승환 대변인, 최순영 전 의원, 이영순 전 의원, 우위영 문예위원회 위원장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조직적 결의로 지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에 합당한 농민과 노동 부합할당 후보로는 최형권 전농 정치위원장과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각각 당선됐다.

유선전화시장 90%씩 지키기 위한 묘안 필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실시 등으로 하반기 지각변동 우려

하반기 시내전화시장의 지각변동이 우려스럽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7월 16일 밝힌 유무선 번호이동 통계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시내전화 번호이동은 29만4,8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시내전화 번호이동 건수인 6만2,934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하반기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상반기는 숨고르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KT는 아직까지 유선시장에서 2,074만 1,311명(90.1%, 6월기준)의 가입자를 자랑하고 있지만, 하반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이 실시되면 90% 점유율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 인터넷전화사업자 등의 추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자는 유선전화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으며, 신규가입자는 대부분 기존 KT고객들을 흡수한 형태다.

하반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관건

KT의 유선전화 가입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분기 동안 7만6,862명이 빠져나갔다. 매출도 신통치 않다. 2분기 매출은 초고속인터넷의 수익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소폭 상승한 3조290억원으로 알려졌다. 영업이익은 4% 감소한 3,676억원을 기록했다. 게다가 전화수익은 시내·시외전화, 국제전화 수익이 하락한 가운데 1조163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 전 분기 대비 0.7% 하락했다. LM(Land to Mobile) 역시 전년 동기대

비 11.6%, 전 분기 대비 1.6% 하락한 3,585억원을 기록했다. 하반기 번호이동제 마저 시행되면 기존 유선전화에서 형성됐던 90% 이상의 점유율에 급이 감지도 모른다든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KT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후발주자들은 하루빨리 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후발사업자들은 최근 방통위가 문제제기한 긴급전화, 보안 등도 무리없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T는 영상통화, 홈 ATM 등 다양한 고객 기반 서비스가 제공되는 인터넷전화 SoIP(Serv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선보이고 있다. 20만 명을 확보한 SoIP가

입자와 시내전화 가입자를 합쳐 2,000만 가입자를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또한 차별화된 SoIP와 가입자가 두터운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으로 인터넷전화 시장에서 기존의 주도권을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매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유선전화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도 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전화와 번호이동제 도입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망내할인 확대로 소비자들의 유선전화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어 KT 유선전화 요금할인까지 예상하고 있다. KT 유선전화가입자 지키기를 위한 다각적인 시도와 접근이 필요하다.

구분	2008. 5월말	6월		2008. 6월말	점유율
		증감	증감율		
KT	20,762,133	-20,822	-0.1%	20,741,311	90.1%
하나로텔레콤	2,045,536	-26,920	-1.3%	2,018,616	8.8%
LG데이콤	242,111	17,350	7.2%	259,461	1.1%
합계	23,049,780	-30,392	-0.1%	23,019,388	100.0%

구분	KT			하나로(HA)			LG데이콤(DA)			총계
	HA-KT	DA-KT	소계	KT-HA	DA-HA	소계	KT-DA	HA-DA	소계	
2003년(도)누계	63	0	63	15,288	0	15,288	0	0	0	15,351
2004년(도)누계	9,756	0	9,756	173,310	0	173,310	151	50	201	183,267
2005년(도)누계	78,007	803	78,810	180,219	34	180,253	8,130	983	9,113	268,176
2006년(도)누계	182,947	3,576	186,523	337,951	359	338,310	14,261	230	14,491	539,324
2007년(도)누계	208,087	3,310	211,397	421,133	342	421,475	51,647	8,415	60,062	692,934
2008. 1월	18,583	309	18,892	32,797	76	32,873	11,284	2,164	13,448	65,213
2월	15,240	507	15,747	24,927	65	24,992	8,460	1,708	10,168	50,907
3월	19,133	620	19,753	30,784	102	30,886	10,627	2,146	12,773	63,412
4월	17,589	1,021	18,610	31,306	98	31,404	8,971	1,977	10,948	60,982
5월	10,900	548	11,448	5,423	49	5,472	8,980	2,435	11,415	28,335
6월	7,230	478	7,708	3,781	21	3,802	11,409	3,094	14,503	26,013
2008년(합계)	88,675	3,483	92,158	129,018	411	129,429	59,731	13,524	73,255	294,842
전체합계	567,535	11,172	578,707	1,256,919	1,146	1,258,065	133,920	23,202	157,122	1,993,894
점유율	28.5%	0.6%	29.0%	63.0%	0.1%	63.1%	6.7%	1.2%	7.9%	100.0%

필수유지업무 논란 가중

발전, 가스, 철도 등 필수유지 범위 100%



정부가 2006년에 도입한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악용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발전노조와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철도공사 등에 잇따라 필수유지업무 비율 100%를 결정했다. 경기지노위는 가스공사지부에 대해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시설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는 (파업시에도) 평상시의 100%를 유지, 운영한다”고 결정했고, 발전부문 5개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결정했다. 철도공사에는 광역철도 운전과 관제업무는 100%, 고속철도, 전기, 통신 등 나머지 업무도 70% 이상으로 결정해 사실상 파업을 무력화 시켰다.

필수유지비율을 70% 이상으로 결정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할 경우,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파업이 통과돼도 실제 파업 효과를 전혀 거둘 수 없게 된다. 정

부는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도입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자의 파업권을 보장할 것처럼 얘기했으나, 허울뿐인 거짓말임이 드러난 셈이다.

필수유지에 대체근로까지... 파업권 박탈

또 다른 문제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지노위의 편향적 사측 편들기다.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노사 자율교섭이 우선이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동위 조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측은 실제 노동계와 교섭할 대신 곧바로 지노위 조정신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럴 경우 발전, 가스, 철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노위는 사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파업권을 무력화시킨다.

정부의 필수유지업무제 악용은 앞으로 우리 KT노동조합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조합원 특별 의료행사 시행중

노동조합은 조합원(가족포함) 복지후생 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지정 전문병원과 제휴해 의료지원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올해도 제휴 6주년 기념 및 자녀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 의료행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차후 하반기에 시행하게 될 의료행사에 많은 조합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업 지부장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기간 : 2008년 7월 21일(월) ~ 2008년 9월 30일(화)

진료대상 : KT직원(계약직 포함) 및 가족

※ 자세한 사항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문서/정책' 란을 참고하십시오.



“남편따라 같이 오길 참 잘했네요”

2008년 제2차 현장직원 본사방문 실시... 오붓한 가족시간 보내



지재식 위원장은 본사 정문 앞에서 현장직원 및 가족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반갑게 맞았다.

2008년 2차 현장직원 본사방문 체험이 7월 3일(목)과 4일(금) 이틀간 진행됐다.

올 들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본사방문 체험에는 현장직원과 배우자, 가족 등 총 150쌍(3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3일 서울에 도착해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4일 오

전 본사를 방문하여 각 사업부서를 돌아보고 본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지재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은 본사 정문 앞에서 현장직원 및 가족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반갑게 맞이했다. 이들은 첫 본사 방문에 약간 긴장한 듯 했으나 따뜻한 환대를 받고 이내 웃음을 지었다.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추천할 것”
광주NSC지부에서 온 정현철 조합원은 “지난밤에 잘 주무셨냐”는 질문에 “좋은 호텔에서 편하게 잘 잤다”며 “본사 방문이라고 해서 처음엔 흥보나 교육인줄 알았는데 호텔 생활도 해보고 부인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함께 온 부인 선경

숙씨도 “휴가를 내고 같이 왔는데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남편 회사에 대한 소속감도 생기고 참 좋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조합원은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며 “이 행사가 앞으로 꾸준히 계속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서울동부NSC지부에서 근무하는 김명수 조합원의 부인은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 잘 몰랐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우리 회사가 이렇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좋았다. 기회가 되면 아이들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싶다”며 흐뭇해 했다.

한편, 이들은 4일 오전 본사 견학과 식사를 마친 뒤 문화체험 행사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사방문 체험은 올 하반기에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며, 노동조합은 평소 본사 방문이 쉽지 않은 지방에 근무하는 조합원과 현장조합원들을 우선 선정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일자리 늘리고, 남녀차별 없애고

노동부,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발표

앞으로 5년간 여성의 일자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여성 고용촉진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7월 10일(목)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여성의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 ▲일하는 여성 중심의 육아 지원제도 마련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 정착 ▲남녀 차별이 없는 일터 정착 ▲사회합의에 기반한 여성 고용 인프라 확충 등 5대 핵심전략과 2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제4차(2008~20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여성의 역량 제고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육교사와 간병인 등 여성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15%인 여성 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의 비율을 2010년 25%, 2012년 3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법적 보호에서 소외돼 있는 가사서비스와 간병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과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등을 통해 ‘돌봄 노동’의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경

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주부인턴 제도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영아(0~4세)를 가진 취업부모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2년까지 2,276개(현재 1,836개)로 늘리고 여성 근로자의 태아검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태아검진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

노동부는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미사용 휴가나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이나 사고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간호 휴직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남녀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해 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차별 채용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면접 가이드라인과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도 개발,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제헌절 대규모 촛불문화제 참가

KT노동조합, IT연맹 깃발아래 “국민주권·언론자유 수호” 외쳐



KT노동조합은 7월 17일(목) 60번째 제헌절을 맞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천계광장에서 열린 제4차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이날 문화제는 ‘헌법 제1조, 국민주권실천의 날’을 주제로 IT연맹, 금속노조, 화물연대, 철도노조, 공공운수연맹, 다음아고라 등 각계 깃발들이 휘날리는 가운데 1만여 시민들로 가득했다. 당초 7시 예정이던 집회는 경찰이 전경버스를 동원해 시청광장, 세종로, 천계광장 주변을 빼곡히 둘러싸는 바람에 시민들의 합류가 늦어져 1시간가량 지체되었다.

KT노동조합을 비롯한 IT연맹 50여 조합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독도문제 미흡 대응, 비정규약법 확산 등을 비판하며 ‘국민주권, 언론자유, 독도수호, 비정규약법 철폐, 쇄고기재협상’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저녁 8시경 대학생들로 구성된 ‘아스팔트 농활대’가 신명나는 공연으로 촛불문화제의

시작을 알렸고, 극단 ‘훈공’은 이명박 정부와 쇄고기 문제, 민영화 등을 풍자한 만담을 펼쳐 흥을 돋웠다.

민주시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한 변호사는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변치 않았다”며, “시민들은 헌법 제1조에 의거한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자기들 눈과 귀에 거슬리면 무조건 불법으로 매도하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가장 위헌적인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주 동안 촛불문화제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 국제엠네스티 조사관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과도했다고 7월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문화제는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했다고 비판했다.

IT연맹 8차 중앙집행위원회 열려

8월 민주노총 9기 자주통일선봉대 모집 등 논의



IT연맹은 지난 7월 16일(수)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7.17 촛불문화제 집중 참가 건 ▲통일위원회 7. 8월 사업계획 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과전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IT연맹 산하 가맹조직 보고를 시작으로 △6~7월 집회참석 현황 △촛불댄스 UCC 공모전 결과 △사이버투쟁 결과 △연맹 가입관련 △민주노총 중집회의 결과 등의 보고가 이어졌다.

이후 중집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는 7월 26일 예정했던 전국노동자대회는 취소하고, 7월 17일 천계광장에서 개최된 촛불문화제에 집중 참가하기

로 했다. 또한, 통일위원회 7~8월 사업계획 안건으로 8월에 있을 민주노총 9기 자주통일선봉대 모집과 관련해 참가 대상과 선봉대 주요일정 등을 심의했다. 한편, IT연맹 통일위원회 사업 중 ‘통일쌀 나눔운동’ 전개를 위해 조합원 1인당 1,000원을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 IT연맹은 복讎동포를 위한 6·15 통일쌀 나눔운동을 아래와 같이 전개하였습니다.
- 1) 사업명칭 : 6·15 통일쌀 나눔운동
- 2) 사업내용 : 지난해 홍수피해로 심각해진 복讎동포들의 춘궁기 식량문제 해소와 6·15 자주통일시대 의식과 실천의 확산에 기여
- 3) 실천기간 : 7.21 ~ 7.30
- 4) 모금방식 : 6·15 통일쌀 헌음금(조합원 1인 1,000원 성금)
- ※모금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체포영장

도 넘은 공권력, 이랜드파업 배후로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구속



경찰이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3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촛불집회 참여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서는 등 촛불시위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돌입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월 24일(목) 민주노총 총파업과 쇄고기 반대 촛불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이석행 위원장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27일(일) 가족을 만나려던 진영옥 부위원장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이 광우병 대책회의 외 민주노총 지도부에 까지 직접 검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진 부위원장이 미국산 쇄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과 지난해 이랜드 파업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9일(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경찰에서 “이랜드 파업은 사측의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에 원인이 있었고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 합법 파업”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행 위원장은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접한 뒤 “공식적으로 동지들 앞에 인사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제가 만일 저들의 포로가 된다 해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민주노총 8만 조합원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아웃되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대대적인 공세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 등 지도부 검거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목) ‘광우병대책회의의 소속 74개 시민단체가 공익사업 명목으로 올해 8억여 원을 보조금을 배당받아 이미 6억여 원을 받아갔다’는 보도를 접한 후, “불법폭력 반정부시위에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가보조금 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받고 있다.



조합원 하계휴가사진 · 여행수기 콘테스트

노동조합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조합원들의 휴가사진 및 여행수기를 기다립니다. A4 1장 미만의 여행수기 또는 즐거운 추억이 담긴 사진 중 한 장을 고르셔서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 노보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당선된 사진과 수기에는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 KT조합원과 가족
- 양식 : 디지털 사진 1매 또는 여행수기(A4 1장 미만)
- 기간 : 2008년 8월 1일(금) ~ 8월 20일(수)
- 상품 : 총 5분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 보내실 곳 : KT노동조합 전략홍보팀 이메일 (mabin@kt.com)
- 당첨자 확인 : 32th 노보 4면(이메일로 개별연락 예정)